

제14차 삼청포럼

2025. 3. 6.(목) 19:00~20:30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

트럼프 발 무역전쟁: 우리의 대응은?

안 호 영
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, 전 주미대사



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
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

트럼프 발 무역전쟁: 우리의 대응은?

안 호 영
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, 전 주미대사

I. 무역전쟁

1. 전쟁의 전개

-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“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!”라고 하면서 집권 시 관세를 정책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공언함.
- 25.2.1. 캐나다, 멕시코에 대한 25% 관세를 발표하며, 이는 양국에 200개 이상의 공장을 투자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
- 25.2.1. 중국에 대한 10% 추가 관세를 발표함. 중국은 미국산 원유 및 가스, 농기계, 대형차 등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으나,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농산물은 제외하였음.
- 25.2.5.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% 관세를 발표하고, 4월경 반도체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편 관세도 예고함.
- 25.2.13. 4월 초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함. 여기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·비관세 장벽은 물론 심지어 국내 조세(부가가치세)까지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.

2. 트럼프 1기와 비교한 특징

가. 속도

- 1기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집권 후 1년 반이 경과한 2018.7이었던 데 비하여 2기에는 집권 하자마자 2025.2부터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함.

나. 대상 국가 및 품목

- 1기 시 중점 대상 국가는 중국에 제한되고 품목도 철강, 알루미늄 등 제한적이었던 데 비하여, 2기에는 모든 주요 통상 상대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발표함.

다. 다른 이슈와의 연계

- 관세 부과가 1기에 대중국 견제에 제한되었던 데 비하여, 2기에는 불법 이민 및 마약 단속 등 광범위한 정책 구현에 연계하여 관세를 부과함.

3. 무역전쟁의 영향

가. 미국 경제 인플레이

- 2.6. S&P는 트럼프 관세가 집행될 경우, 미국 경제 인플레이가 0.5-0.7% 상승하고, 성장률이 0.6%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.

나. 미국 경제 이자율 상승

- 관세뿐 아니라, 이민 단속 강화, 대규모 감세 효과 등으로 미국의 이자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임.

다.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25.1. IMF는 트럼프 관세는 장기 이자율을 상승시키고, 국제 경제에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함.

라. 법치주의 훼손

- Mankiw가 “A VAT is not a trade restriction.”이라고 이야기하였듯이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 조치들은 기존 통상법에 근거가 없는 조치들임.
- 법치주의는 1945년 이후 미국이 건설한 국제 질서의 핵심인데, 통상 분야 법치주의의 훼손은 전반적인 법치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며, 대표적인 개방형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에 특별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

마.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

- KIEP는 한국의 대미 수출만 450억 달러 감소하고, 무역전쟁 확산으로 GDP는 0.3-0.7%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.
- 그러나 품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. 기술적 우위 품목은 오히려 전략적 우위를 점할 것. 그러나 가격 경쟁력 의존해 온 품목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됨.

II. 우리나라의 대응

1. 트럼프 1기 시의 대응

가. 철강,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

- 할당 관세로 대미 수출을 유지하였음.

나.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

- 현지 투자로 대응하였음.

다. 무역 불균형 문제

- 미국산 (LNG 등) 수입 확대에 대응하였음.

라. 한미 FTA 협정 개정

-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감축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하였음.

마. 친 무역 여론 확산

- 미국 정부, 의회, 학계, 민간단체(예: 전 미국 축산업자 협회) 등에 대한 친 무역 여론 확산을 위해 노력함.

2. 트럼프 2기의 대응

가. 큰 그림

- 이슈 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한·미는 경제 구조상 Win-Win의 큰 그림으로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-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적의 파트너임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함.
- 무역 역조 문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통한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함.

나. 보편 관세에 대한 예외 조치

- 미국은 트럼프 1기의 경험에 비추어 관세 예외 조치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.
- 산업연은 예외가 어려울 경우에도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측하였음.

다. 현지 투자 확대

- 우리나라는 이미 가전,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 등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였고 2024년에는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었음.
-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되 미국 내의 생산 단가,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.

라. 산업 협력 확대

- 미국의 큰 시장과 원천 기술, 제조업 확대 의지, “규범에 기초한 무역 체제” 훼손으로 공급망 장애가 확대되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광범위한 산업 협력 확대가 필요함.
- 특히 반도체, 배터리, 조선, 원자력, 가전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 보유하고 있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산업 협력에 관심이 있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민·관 협력으로 산업·기술 협력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종합적, 체계적,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,

마. 산업별 차별화된 정부 대응

- 기술적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기술의 초격차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.
- 기타 산업은 맞춤형의 별도 지원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.

바. “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” 부활 모색

-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, EU, 캐나다, 호주 등과 연대하여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 부활 모색이 필요함.
- 그러한 시각에서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사.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
- “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” 훼손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위협이 됨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함.
- 그 해결책의 핵심은 기술의 초격차 유지일 수밖에 없음.
- 미국·중국·일본·EU는 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,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·규정·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이러한 “우물 안 개구리” 식 태도는 공멸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끝.

